민주 "헌법 파괴범 파면"… 국힘 "복귀 결정시 개헌"

여야 지도부, 국회서 선고 시청
선고후 대응책 논의 입장 발표
혁신당 "국가폭력 악순환 끊어야"
尹 불출석 "질서 유지·경호 고려"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본 뒤 각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내일 10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며 "TV로 자연스럽게 (선고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 모여 선고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의원총회도 곧장 열어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는 '비상 행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 등에서 TV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선고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 막바지 신경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파면은 4·3에서 시작된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4·3 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자는 어떤 권력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역사는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며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연대와 기억의 근은 4·3의 정신이자 유산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탄핵심판' 인용 57%… 기각 35%

여론조사기관 전국 지표조사
헌재 '신뢰' '불신뢰' 46% 동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57%,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달 31~이달 2일(4월1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35%였다.

한 주 전보다 탄핵 찬성 의견은 1%포인트(p), 탄핵 반대 의견은 2%p 줄었다. 대신 모름 또는 무응답이 3%p 늘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인용 33%·기각 58%로 탄핵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60대의 경우 인용 50%·기각 47%로 오차범위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인용 89%·기각 9%, 중도층 65%·26%, 보수층 인용 27%·기각 67%였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용 예상' 55%, '기각 예상' 34%였다. 한 주 전보다 인용 예상은 4%p 늘고, 기각 예상은 5%p 줄었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모두 46%로 조사됐다. 한 주 전보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7%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p 늘었다.

헌재 탄핵심판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4%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한 대행·이 대표,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문 '막판 조율'… 종일 평의 '철통보안'

선고 절차·문구 등 세부 조율
내부에도 결정내용 극비리 함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4일 아침까지 막판 조율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사무실 대부분은 커튼이 쳐져 있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도 가급적 외부와 연락을 자제하고 결정 내용이 혹시라도 유출될까 극도로 유의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도 평소와 달리 4일 오후에나 공개되며 별도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비실명화 작업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정 내막을 상세히 담은 각종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되고 있으나 신빙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묘소를 참배 후 방명록에 '헌재의 정의로운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신하며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 SNS

김영록 지사, DJ 묘소 찾아 '尹 탄핵 인용'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원했다.

김 지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김 전 대통령묘소를 찾아 방명록에 '헌재의 정의로운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신하며 기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혼란과 분열을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 가길 국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전하는 용기와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타파와 참여민주주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칙주의와 협상력'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밝혀왔다.

오지현 기자

경찰, 오늘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헌재 경내·주변 등 '진공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인 3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폭탄 테러 등 극단적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중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헌재 주변에서 폭발물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헌재 경내뿐만 아니라 버스 차벽에 둘러싸여 이른바 '진공화'가 이뤄진 반경 150m를 샅샅이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로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이날 헌재를 포함한 서울 도심권에 110여개 부대를 배치했다. 연합뉴스